

Ⅲ. 政策 課題

1. 南北經協 活性化 措置 評價 및 展望

- 北側의 拒否 表明에도 불구하고, 남북경협 재개에 중대 轉換點 예상
 - 短期: 委託加工業 등을 중심으로 간접교역이 중대
 - 長期: 남북당국간의 협의 및 대화를 통한 미비점 개선여하에 따라 對北 直接投資 開始
- 정부와 기업의 밀접한 협조 및 공동 대응 요망
 - 정부: 경협에 대한 일관적인 정책, 남북대화 준비
 - 기업: 對北 과당경쟁 지양, 정부와의 협조 및 업계간의 상호 협력

○ 南北經協 活性化 조치

- 企業人 訪北 등 남북 경제인사 상호 방문 허용
 - 1년 6개월 단위의 방북증 발급, 1회 한도로 연장 가능
- 국내 기업의 북한 사무소 설치 허용
 - 업무연락, 시장조사, 자료소개, 연구, 자문, 계약체결, 대금결제 등
- '示範事業'은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는 事案別로 허용
 - 제 3국과의 합작 및 현지법인을 통한 대북투자를 허용함
- 委託加工 活性化 추진
 - 위탁가공 기술자 방북 대상은 생산 설비의 운용, 생산기술지도, 품질 관리 등을 위한 요원으로 예상되나 신중적으로 허용할 방침임
 - 대규모 설비 반출은 統一院 長官, 기타 소규모 설비 반출은 外國換 銀行長의 승인을 받아야 함

○ 평가: 경색된 남북경협에 轉換點을 마련

- '核優先 對北政策'을 수정, 북핵문제로 단절되었던 남북관계를 경협으로 정부가 주도·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임
- 對北 輕水爐 支援 및 북한과 관련국간 관계 개선 등 한반도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남북경협을 검토, 진전시켜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았음
- 北美 및 北日間の 관계 진전이 빨라 北韓市場 선점의 필요성이 대두됨

○ 북한측의 거부와 관계 없이 민간의 경험 지속 예상

- 북한으로서는 金正日 체제의 정착이 우선적 과제이며 남북관계의 긴장완화를 경계하는 내부 강경 세력을 무마해야 하는 상황임
- 그러나 이번 北側의 拒否는 정부와의 공식적인 경험 및 대화 재개에 대한 거부에 불과, 우리 기업인들과의 경험은 유효하다는 것으로도 해석됨
- '88년 7·7선언 때도 북한은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그 이후 南北間의 間接交易은 점차적으로 擴大되었음
- 우리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대한 북측의 관심이 계속 확인되어짐

○ 전망

-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대외 개방 부담이 적은 委託加工業 중심으로 간접교역 활성화가 예상됨
- 長期的으로는 남북당국간의 협의 및 대화를 통한 미비점 개선여하에 따라 對北 直接投資가 開始될 전망임

○ 정부의 대응: 경험에 대한 一貫性을 유지

- 정치면의 남북 관계가 곧 개선되지 않더라도 정부는 政經分離의 원칙을 일단 적용, 남북경협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북한의 對外 開放을 유도해야 함
-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경협이 北韓經濟에는 도움이 되나 단기적으로도 북한체제의 큰 변동을 유발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함
- 南北對話는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키포인트이므로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북한과의 基本條約 締結에 노력해야 함
- 미국·일본·유럽의 국가들의 對北韓 進出은 남북경협의 변수로 작용하므로 實利的 經濟外交에 주력해야 함

○ 기업의 대응: 정부 및 關聯業界와의 협력을 통한 단계적 對北 投資 도모

- 우선 間接交易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위탁가공 시설제 반출 등 소규모의 示範事業을 성사시킨 후 대규모의 對北投資를 실시하되 이는 投資 保障이 法制化된 후 서방국가와의 권소사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한 한 예임

(김 창 권)